

북한판 사극 ‘여인 천하’와 김주애

태평로

안 용 현

논설위원



북한이 인정하는 김일성의 부인은 김정숙이 유일하다. 김정일을 낳았고 ‘항일 여성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그런데 북 역사서에 김정숙의 어머니 이름은 ‘오씨 여사’로만 나온다. 김일성이 장모 이릉도 모를 만큼 김정숙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정숙은 1949년 출산하다 32세로 사망한다. 김정일이 일곱 살 때였다. ‘김씨 여자들’ 불행의 시작이었다.

김일성은 6·25전쟁 중인 1951년 비서였던 김성애와 비밀 결혼을 한다. 1958년 가족사진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김성애 존재를 알렸다. 김성애는 자신의 아들을 김일성 후계자로 세우려고 김정일과 권력 암투를 벌였다. 김정일이 이런 계모를 그냥 둘 리 없다. 김일성이 죽고 3년 만에 김성애는 모든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고 그녀의 자식들도 평양 밖을 떠돌아야 했다. 두 번째 불행이었다.

김정일의 첫째 부인에 대해선 분석이 엇갈린다. 중국 외교부 직속 기관이 발행하는 잡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낸 홍일천 아니면 김일성 집무실 타자수 출신인 김영숙일 것”이

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김영숙과 결혼한 것으로 판단한다. 홍일천이든, 김영숙이든 딸만 낳았다. 그 무렵 김정일은 영화배우였던 성혜림과 동거하며 장남 김정남을 얻었다. 김일성은 남편이 있던 성혜림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고 성혜림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김정일이 다른 여성들에게 빠지자 성혜림은 모스크바에서 외롭게 살다가 2002년 사망했다. 모두 김정일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김정일은 1970년대 중반부터 재일 교포 출신 무용수 고용희와 살았다. 아들

권력 암투 휘말린 ‘김씨 여자들’
‘김정은 배지’로 우상화 완성
후계 구도 짜기가 다음 과제
세습 왕조 위기, 후계에서 시작

김정철과 김정은, 딸 김여정을 얻었다. 그런데 고용희는 2000년대 유선암에 걸렸고 불치 상태로 고생하다 2004년 52세로 사망한다. 그러자 김정일은 22세 연하인 김옥과 동거했다. 김옥도 김정은 집권 이후 종적을 감췄다. 김씨 여자들 대부분이 요절하거나, 중병을 앓거나, 버림받거나, 숨어 살아야 했다. 자의든 타의든 후계 권력과 관련이 있다. 왕조 시대 왕비와 후궁들, 그 주변이 후계자를 놓고 암투를 벌였던 것과 다름없다.

지금 북에서 김씨 여자들의 불행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정은 부인 리설주일 것이다. 성혜림처럼 아들을 낳아

도 후계자로 일찍 낙점받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고, 중병이라도 걸리면 어린 자식들의 장래가 불투명해진다. 은하수관현악단 가수 출신인 리설주는 김정일 여자였던 영화배우 성혜림, 무용수 고용희와 계열이 비슷하다. 김정은이 아버지처럼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소문은 아직 못 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왕조 국가를 넘어 신성(神聖) 국가다. 김정은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후계자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에게 자녀가 몇 명인지, 아들이 있는지 확인은 안 된다. 1남 2녀, 딸만 2명, 혼외로 낳은 아들,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떠돈다. 확실한 건 리설주가 낳은 딸 김주애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김정은이 주애를 너무 애뺌한다는 사실이다. 탈북자들에게 물어보면 ‘봉건사회인 북에서 딸은 후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김정은이 2022년 중앙간부학교에서 후계자를 뜻하는 ‘후사’라는 말을 꺼낸 직후 주애가 등장하고, 당 부장과 대의원에 여성 비율을 높인 것은 주애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김주애 후계를 가장 원하는 사람은 리설주일 것이다. 자신과 자식들이 사는 길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아직 40세다. 김정일은 42세에 김정은을 얻었다. 김정은이 ‘김정은 배지’로 우상화를 완성한 만큼 북한의 후계 구도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판 사극의 개봉 박두다. 세습 왕조의 위기는 후계에서 온다.



가는 신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약속한 신호로 소통한다. 지속 가능한 사업과 자원 보호를 위해 금여기가 있고, 배 한 척이 채취해야 할 양도 정해져 있다. 조류가 거세고 들고 나는 물이 많은 사리 물때에 작업이 제일 힘들다. 물속에서 일하는 해녀도 이 물때는 피한다. 갈고리로 키조개 구멍을 확인하고 하나씩 뽑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키조개는 진흙을 씻고 껍데기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한 후, 커다란 수저 모양의 도구로 조가비를 열고 관자를 꺼낸다. 키조개는 쉬 상하기 때문에 바로 급속 냉동 보관한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김준의 맛과 섬 [197]

오천향 키조개 두루치기

수영은 조선 시대 수군 지휘부 ‘수군 절도사영’이다. 수영은 부산 수영, 경남 통영, 전남 여수와 해남, 그리고 충남 보령에 있었다. 임진왜란이 여러 장르에 등장하면서 알려졌다. 충청수영은 아는 이가 많지 않다. 수영은 모두 아름답고 정장 좋은 곳에 자리했지만, 오천향에 있는 충청수영 영보정은 으뜸이다. 다산도 백사도 이곳을 찾아 조선 최고의 정자라 칭송했다. 그곳에 맛이 빠질 리 없다. 오늘날 오천향을 대표하는 해산물물은 키조개다. 인근 보령항까지 모두 37척의 키조개를 채취하는 잠수기 어선이 있으며, 그중 15척은 오천향에 선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키조개의 60~70%를 공급한다.

오천향 키조개는 종패를 뿌리지 않는 자연산이다. 이곳에서는 키조개로 회, 무침, 볶음, 데침, 두루치기 등 다양하게

조리한다. 그중 두루치기를 주문했다. 보통 두루치기는 육고기를 넣고 콩나물이나 버섯과 볶다가 양념한 육수로 끓인다. 섬이나 어촌에서는 육고기를 해산물로 대신한다. 태안에서 두루치기에 봉장어를 선택하듯이 이곳에서는 키조개를 이용한다. 키조개 관자, 날개살, 꼭지살을 버섯, 미나리, 양파, 대파 위에 올리고 양념장을 올려 보글보글 끓인다. 채소와 키조개에서 나오는 육즙으로 충분히 육수를 넣지 않는다.

키조개를 채취하는 잠수기 어업은 물속의 잠수부와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줄을 잡는 선원의 호흡이 중요하다. 수심 40미터 내외의 물속에서 키조개를 찾아 이동하는 잠수부의 동선을 따라 배를 이동해야 한다. 잠수부가 호흡할 때 배출하는 기포가 그 제척이다. 채취한 키조개를 올리거나 물 밖으로 나

社 説

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문란 수준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의 도 넘은 탄핵 공세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인 수사의 차질까지 빚어지게 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2일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밀려 결국 사퇴했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뚜렷한 위법도 없는 사람이 취임 6개월여 만에 물러나야 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그동안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가 8~9월 임기가 만료되는 MBC·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률상 탄핵 대상이 아닌 부위원장도 함께 고발하면서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같은 이유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하려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고 구체적 법 위반도 없는데 자진 사퇴해야 했다. 이로 인해 방송 재하가 업무가 마비되면서 MBC·KBS 등 34개 방송국이 한 달간 면허 없이 방송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3명) 추천·표결도 거부해 ‘위원장·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를 초래했다. 그러고선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식물 위원회로 만들려 한 것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말~8월 초 취임할 수 있다. 하지만 MBC 사장 교체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민주당은 새 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방통위원장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를 뜻대로 임명하고 사장 교체도 못 하게 하는 방송 3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

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법안 내용과는 정반대로 공영방송 사장들을 폭력적 방법으로 쫓아냈다. 그런데 다시 야당이 되자 ‘언론 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하자 바로 검사 탄핵을 추진했다. 이 전 대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들이 13년 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김만배·신학림씨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때 위협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김만배·신학림씨는 최근 구속됐다. 억지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알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13차례다. 이 가운데 자진 철회한 2건을 포함해 9건이 검사를 겨냥한 것이다. 그동안 검사 탄핵안은 현재에서 기각됐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현재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이 현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일 것이다. 현재 심판 중에는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 위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고 모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검사 탄핵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다. 철저히 정략적이라는 뜻이다. 국기 문란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기 문란이라고 불려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최저임금, 한계 업종만은 차등 적용” 소상공인 호소 또 외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또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해 부결시켰다. 내년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이날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번만은 구분 적용을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올랐다. 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속히 끌어올린 영향이었다. 그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1년 새 25만명 늘어났다. 전체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이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37.3%에 달한다고 한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 순서에서 중간 지점)의 60%가 적정인데 지금은 90%에 육박한다고 말한다. 결국 현재 최저임금제는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이다.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 문제를 바로잡는 첫 단추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2018년 이후 수년째 표결을 했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경영계는 이번에도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취약 업종만은 다른 업종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했다. 올해는 공익 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이들로 바뀌면서 예년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으나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 현지 물가 등 상황은 크게 다르다. 그런데도 전국 모든 작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일이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차이를 두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업종·지역별은 물론이고, 연령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저소득층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는 단편적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인상하면 취약 계층 일자리부터 줄어든다는 것은 많이 입증돼 상식이 됐다. 그렇다면 보완책이 나와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 문제의 개선을 언제까지 틀어막을 건가. 이러다간 나중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것이다.

김민전 의원의 최초 제기, 힘 받았다

부정선거 의혹, 드디어 '제도권 의제'로 ...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늦었지만 잘했다

- [재야]가 외롭게 오랫동안 지적한 문제
- 국회 기회주의와 비좌파언론이 [국우]로 폄하한 탓
- 처음으로 [제도권] 의제화 ... 만시지탄이나 매우 다행

아주 중요한 논제

국회의원 전당대회의 중요한 논제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것인가. 거리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연장선엔 또 하나의 논점이 있다. [부정선거] 이슈다.

당권에 도전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그리고 최고위원에 도전한 김민전. 이들이 이 논제를 일제히 떠올렸다. 이것을 재야(在野) 우파만의 고독한 관심사로 놓아두지 말자. [국민의힘 = 제도권]의 정식의제로 다루자는 것이었다.

김민전 의원에 주목한다

중요한 사태 진전이다. 국민의힘 안의 기회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국우]라 매도해 왔다. 강성 우파를 적대하는 비(非) 좌파 언론들 역시 이를 철저히 파문해 왔다.

이 [집단 따돌림]을 최초로 거스른 제도권 여당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22대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일 것이다.

그는 말했다. “선거 전체를 부정(不正)이라 선험적으로 규정하진 않겠다. 그러나 상당한 의구심이 있을 때는, 제대로 조사하자.” -김민전 <페이스북> 2024/06/25

사전투표 폐지 들고나온 나경원 김민전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한 원희룡도 말했다. “국민의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한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파이낸셜투데이> 2024/06/25

또 다른 당 대표 도전자 윤상현도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규명은 국민의힘의 책무다. 당 대표가 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하겠다.” -유투브 <이복규 TV> 2024/02/02

나경원 김민전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공동 발의했다. 사전투표를 없애자는 것이다. 법안엔 국민의힘 의원 강선영·김석기·박성민·백종현·서명욱도 동참했다.

국정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중요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의 [선거인 명부 + 사전투표] 관리가 조작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국민의힘과 언론은 품책도 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 ...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나경원 김민전 원희룡 윤상현 네 의원이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깬 셈이다. [재야] 우파만이 묵 터지게 외치던 [부정투표 이슈]를 비로소 처음 [제도권 의제]로서 성립시켰다. 만시지탄(萬時之歎)이나 다행이다.

[민주당]과 [아스팔트 파파]는 일심동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아스팔트 우파]는 적이나 다름없다.

이 분열은 마땅히 지양(止揚)돼야 한다. 선명 자유 투쟁의 방향으로!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류근일 칼럼: 한동훈 당대표 출마 선언문 분석①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과 스탠스 달라... 폐배 책임 대통령 탓이라 했다

류근일 칼럼: 한동훈 당대표 출마 선언문 분석②

그저 재개발 [강남]을 패시비티스트 아닐까... 유승민 이론적 류 넘세 물물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6월 30일 게재되었습니다.

NO. 97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